

## 북한을 얼마나 아세요?



김중위 | 초대 환경부장관

지금쯤 해서 이제는 북한이 참으로 어떤 나라 인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아해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초리를 뒤로 하고 북한 도와 주기에 열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NLL침범이나 6·25후 최초로 가기로 한 열차 운행의 중지같은 의리 없는 배신 만이 에코처럼 들려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북한의 실상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만 간추려 보아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제 백성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열을 올리고 <나라>라고 하는 엄연한 국제법적 지위의 국가가 위조지폐나 찍어 내고 마약이나 밀수하고 무슨 요상스러운 <요덕수용소>나 지키고 있는 수작들이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이다.

마치 <007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집단처럼만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할까를 비교 해보는 여론 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나라>라면 최소한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할 도덕적 책무만은 이행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거창한 이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가의 존립 이유와 근거가 결국은 국민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책무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 주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360만명의 주민이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른다는 얘기가.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이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금년 말까지 매달 4만톤의 식량을 지원해야 굶어 죽어갈 목숨들을 살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가?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친 김에 WFP가 제시하고 있는 간단한 통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북한 전체 인구의 36%가 영양 실조에 걸려있고 7세미만 어린이의 60%가 발육부진(stunted & underweight)이고 전체 어린이의 8%는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wasted)라는 것이다.

거창하게 국제 사회가 다루고 있는 인권 문제 이전에 식량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인권 문제

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으니 어찌 북한을 하나의 국민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상태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싶을까? 이렇고도 지도자들은 나라를 경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핵무기를 개발하면 식량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일까? 식량문제는 국제 사회가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기만 잘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공산당 선언>대로 <소멸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국민은 오직 조직의 일원으로서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결국 내려야 할 결론은 그냥 단순한 공산당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공산당 국가인 중국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 이상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북한은 진정 무엇인가? 나라일 수 없는 하나의 집단이다. 그것도 <패륜적인 집단>이요 <범죄집단>이라는 생각이다.

마피아와 같은 범죄 집단도 충성을 담보로 조직원인 제식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오직 충성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만약에 방대한 군사력 유지와 핵무기에 쏟는 정성과 자원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한심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처럼 흑묘(黑貓) 백묘(白貓)론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기만 하면 식

량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적 경제협력도 훨씬 쉽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북한의 체제에 있는 것이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김정일을 위시한 집권층의 폭정(暴政)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체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필자는 가혹하게 말해서 국제 문제로 대두될 때까지 북한인권 문제와 마약밀수와 위조지폐 문제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 싶다.

국가라면 이러한 범죄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상식밖의 얘기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조차 <범죄정권(범죄집단 . 범죄체제(Criminal regime)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 불렀을까? <범죄정권>이라면 협상이나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타도와 응징과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의 수령(首領)은 폭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폭정은 또다시 폭정을 유지하기 위해 폭정을 할 수밖에 없는 <폭정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체제하에서는 사상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종교의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얘기는 모두 사치다. 양심의 자유조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도 한때는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라도 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통할 수 없게 되었다. 폭정의 권력이 <세습(世襲)>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체제의 폭정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이것은 옛날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았을 때의 얘기도 아니고 남북교류와 협력이 무시(無時)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얘기다. 전직(前職)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부나 국민들이 그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국회의 원내 총무가 여야협상 대표로 나서서 협상하듯이 제멋대로 남북간에 통일 논의를 벌리겠다고 하는 시점에 도 벌어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외교적 목적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 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인권문제다.

공개처형, 강제낙태, 여성매매, 유아 살해, 잔인한 고문과 처참한 처벌, 필설(筆舌)로 다 할 수 없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증언들을 통해 들어 알고 있다.

요덕정치범 수용소! 이제는 서방세계 누구라도 알고 있는 곳!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곳! 수용된 2만여명이 옥수수 한 그릇과 소금 한 숟갈로 14시간의 중노동과 채찍질을 견뎌야 하는 곳! 뱀이나 쥐를 잡아 포식하면 최고로 운이 좋은 날인 곳! 탈출하다 잡히면 총알이 아까워 돌팔매질로 처형당하는 곳!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덮어 준다고 덮어질 것이며 동포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로 마약 밀매(密賣)는 또 어떤가?

세상에 국가가 마약을 외교 행랑에 담아 해외 공관에 밀수출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어 본적이 있었나? 그러나 이 또한 엄연한 사실인 것을 어찌겠는가? 이는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과거에는 마약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밀수출을 했지만 이제는 아예 북한에서 직접 양귀비 재배사업(일명 백도라지 사업)을 통해 아편을 추출한 다음 헤로인을 만들어 비밀리에 판다고 하니 어찌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범죄행위가 이집트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적발되었으나 아직까지 강력한 보복을 당하

지 않은 것만으로도 북한은 가슴을 쓰러 내려야 할 판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위조지폐의 제조 유통이다.

북한에서의 위조지폐 제조 또한 어느 한 범죄 집단이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 또한 국제범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직접 위조지폐 공장을 짓고 스위스제 인쇄기를 들여다가 위조지폐를 찍어 내고 있으니 어느 나라가 이를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북한이 제조한 위폐(僞幣)는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를 그 전진기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미(美)의회보고서를 보면서 무슨 다른 할 말이 있어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한국정부도 인류가 갖는 보편적 국제법 규와 문명사적 양심으로 북한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유지는 국제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의 소박한 민족 감정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범죄는 국제범죄이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 일뿐 우리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회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음)

## □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 명예 행정학박사
- 《사상계》 편집장
- 초대 환경부장관
- 12, 13, 14, 15대 국회의원
- 한국문인협회 및 국제펜클럽 회원